

정후식칼럼



논설실장·이사

‘일하는 국회’ 이번엔 실현될까

다당제 구도로 출발한 20대 국회에서 여야는 지난 4년간 끝없이 충돌과 대립을 거듭했다. 견제와 균형, 타협과 절충의 정치를 기대했지만 몸싸움이 난무하는 ‘동물국회’, 보이콧과 파행을 거듭하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식물 국회’를 오가더니 끝내 결실 없이 사실상 막을 내렸다. 그 여파로 무려 1만 5200여 건의 법안들이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처지다. 이는 20대 국회 전체 발의 법안(2만 4000여 건)의 3분의 2에 달하는 규모로, 역대 최다이다. 공들여 만든 법안들이 제대로 된 심사 한 번 받지 못하고 무더기로 사장되는 것이다. 이러니 ‘놀고먹는 국회’ ‘선량이 아니라 한량(閑良)’이라는 비난을 들어도 싸다 하겠다.

의원 특권부터 내려놓고

여야는 막판 ‘유종의 미’를 거두자며 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처리 법안은 100여 건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여태껏 처리하지 못한 법안 중에는 민생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부족한 의사 수를 늘려 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공공 의대 설립 법안, 특수 고용직과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 혜택을 주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한국형 뉴딜정책 관련 법안 등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 대표적이다. 30여 년 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자치 분권 강화를 위한 법안들도 여러 건 있다. 사장(死藏) 위기에 놓인 광주·전남 지역 주요 현안과 관련된 법안들도 수십 건 이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정·외국·남초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들의 처리 역시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광주 한복판에서 오월의 진실을 폄하하려는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는 것이다. 여순사건 진

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도 발의 이후 3년째 통과되지 못했다. 이들 법안들이 폐기되면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모든 절차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임기 말 법안의 무더기 폐기가 반복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본업인 입법 활동은 뒷전인 채 당리당략과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한 탓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국회가 들어설 때마다 핵심 개혁 과제로 ‘일하는 국회’가 가장 먼저 꼽히곤 하지만 매년 헛구호에 그쳤다. 따라서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려면 국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매월 임시국회를 여는 등 ‘상시 국회’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임위원회 운영도 의무화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면 수당도 삭감해야 한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역시 국민적 요구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공약으로 국회의원에 부여되는 헌법상 불체포·면책 특권을 국민이 직접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를 내건 바 있다. 청렴과 국가 이익 우선, 지위 남용 금지 등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면 선거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대통령은 탄핵소추권으로,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주민소환제로, 견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유독 국회의원만 임기 중 국민이 책임을 물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 때문에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요구에는 21만여 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다행히 21대 국회 거대 양당의 첫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기대를 갖고 지켜볼 일이다.

고비용·저효율의 대명사였던 국회를 진정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의를 전당’으로 탈바꿈시키려면, 민주당과 초선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민주당은 엇그제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통해 177석의 ‘슈퍼 여당’으로 재탄생했다. 범여권이 지 포함하면 개헌안 의결만 빼고 나머지 모든 것을 국회에서 다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국회 문화를 바꾸고 정치 선진화를 이루는 것 역시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초선들 새바람 기대한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의원들의 행보도 중요하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 중 절반이 넘는 151명이 초선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일색인 광주·전남의 경우 당선인 18명 중 13명이 초선으로 그 비율이 더욱 높다. 유권자들이 경험 많은 다선 의원들 대신 정치 신인들을 선택한 것은 개혁과 쇄신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활동에서 구태를 혁파하는 새바람을 일으켜 주기를 기대한다. ‘금배지만 달면 총기(鵬氣)가 사라지고 도덕성도 흐려진다’는 비아냥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이 지역 당선자들은 또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거나 5·18 외곡을 처벌하는 입법을 통해 5·18의 완전한 진상 규명을 앞당기고, 호남 정치 복원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 주었으면 한다. ‘작은 정치인(politician)이나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큰 정치인(statesman)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 당선 소감에 담겼던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진정한 선량들을 보고 싶다.

은편칼럼

코로나시대, 소비 생활도 바꿔 보자

리할 수 있는 계란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열 개들이 유통란 한 팩이 1만 6000원에 전열되는 것도 있는데 배짱 좋게 집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나? 강남의 유명 백화점 식품관 가격이니, 부자들이야 가격 따지지 않고 사겠거니 싶지만 계란 한 판 가격이 삼겹살 서너 근 값이라면 ‘애그플레이션’이란 조어가 생길 만도 하다. 그렇다고 삼겹살이 만만한 가격은 아니다. 집에서 쉽게 구울 수 있는 삼겹살과 목살은 지난해에 비해 10% 넘게 오른 반면 돼지갈비는 삼겹살의 반값으로 떨어지고 있다. 돼지갈비가 집밥 메뉴로서는 불리한 까닭이다.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들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가와 낙농업계 종사자들이다. 상추와 딸기, 토마토 등 친환경 농산물의 급식 통로가 막히자 일반 농산물보다 낮은 가격에도 팔지 못해 폐기하는가 하면, 재고가 쌓여가는 우유업계는 주말마다 할인 행사에 나서고 있지만 소비 진작에는 역부족이다.

통계청이 내놓은 지난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는 세계 주요국들에 비해 변동 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강도 높은 봉쇄 조치를 취해 사재기 열풍이 불면서 생필품과 식료품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지만 국내에서는 사재기가 일어나거나 공급망이 흔들리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0.3%로 1999년 7월 이후 최저치다. 이는 꼭 소비해야만 하는 식료품과 석유류 이외에는 소비가 미미하다는 뜻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둔화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긴급 재난 지원금이 풀리고 그동안 미뤄오던 개혁이 이루어지면 동네 마트와 전통시장의 매출이 늘고, 이들에게 공급하는 중간 도매상과 생산자들에게도 활기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V자형 경기 반등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불과 몇 달 동안 우리는 그동안 상상하

지도 못했던 일들을 겪어왔고 믿기지 않는 현실을 보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시작되자, 각국은 국경을 폐쇄하고 의료용품의 수출을 규제했고 대의를 내세우던 국제기구들은 무기력하게 강대국들 눈치만 보고 있다. 결국 위기 앞에서는 ‘아생연후살타’(我生然後殺他)라는 바둑 격언처럼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 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외환 위기와 미국발 금융 위기를 국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극복해 온 경험이 있다. 형편이 어려워질수록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인간사이니 조금만 달리 생각해도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다. 유통란이 오르면 특란을 사면 되고, 값이 싸진 우유가 물리면 평소 손이 가지 않던 치즈도 먹어 볼 일이다. 삼겹살이 오르면 불포화지방산이 높은 오리고기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닭갈비도 있다. 분디 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수요는 시절 따라 변해가 기 마련이니, 오늘 비싸다고 값싼 게 아니고, 싸다고 맛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옥영석 농협광주공판장장

이십여 년 전 우유와 계란을 모두 취급해 본 한 선배는 가성비로 볼 때 계란은 비싼 것이, 우유는 싼 상품도 무난하다는 경험칙을 귀뜸해 주었다. 십여 년 넘게 상품을 다뤄 본 선배님 말씀이니 아내에게 장 볼 때 잊지 말라고 몇 번이나 일렀어도 유통란 맛보기가 어려운 걸 보면, 주부 입장에서 두 배나 넘는 상품을 선택하기가 보통 뻘심으론 안되는 모양이다. 특란, 왕란, 초란, 유통란 등 종류가 많기도 하고 크기도 다양한 계란은 가장 쉽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완전식품이다. 코로나19가 세상을 바꿔놓으면서 집밥족이 늘어감에 따라 간편하고 쉽게 요

기고

V세대, 변화에 투자하라

그런데 정쟁 이상의 파급력으로 코로나19가 가져온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은 가히 ‘혁명’이라 불릴 만큼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많은 이들이 “세상은 코로나19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하나의 세대를 구분 지을 정도로 아주 큰 사건이라는 것이다. 밀레니얼·Z세대 역시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온몸으로 겪으며 변화하고 있다. 바이러스 대란을 겪은 이들 세대는 이제 바이러스(Virus)의 첫 철자를 따서 ‘V세대’라고 일컫는다. ‘V세대’의 특징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한 언택트(비대면)가 확산되면서, 소통 방식과 교육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 것이다. 이들은 플랫폼을 통해 영상 회의를 하고, 원격 의뢰나 온라인 강의, 무인 점

포에 익숙해졌다. 코로나19 사태가 V세대 삶의 방식을 바꾸고 그들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코로나19가 세대의 변화만 가져온 것은 아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갑작스러운 변화는 세계적인 경제 침체를 일으켰고, 이는 침사리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자칫 V세대가 부모 세대 보다 더 큰 경제적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고 했다. ‘선도형 경제’를 위해 ICT, 바이오 분야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를 개척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의료 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 산업 등의 강점을 활용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V세대는 이러한 코로나 이후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디지털 혁명 이상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원격 근무, 비대면 의료 진료,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산업은 물론이고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로보, 인공 지능, 스마트 팩토리, 사물인터넷(IOT) 산업의 성장은 필연적이다. 디지털로 무장한 V세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는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 이들의 성장을 위해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플랫폼 또한 하루빨리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콘텐츠와 플랫폼, 하드웨어와 네트워크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V세대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시켜야 할 것이다.



김구태 농협경주교육원 교수

향후 급변하는 세상에는 ‘디지털 원주민’으로 불릴 정도로 디지털에 익숙하고, 디지털로 모든 것을 소통하는 ‘밀레니얼·Z세대’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 밀레니얼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사회 지형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기업들도 밀레니얼·Z세대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社說

21대 국회 ‘5·18 정신 헌법 반영’ 좋은 기회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계기로 21대 국회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당과 정의당까지 가세했다. 문 대통령은 그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며 “언젠가 개헌이 이뤄지면 그 뜻을 살려 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년 전 ‘5·18 민주 이념의 계승’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표결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폐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청와대가 아닌 정치권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 등 개헌안이 논의될 기대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

해 5·18의 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고 호응하고 나섰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SNS에 올린 글에서 “5·18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숭고한 역사로 헌법에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전국 시도지사들도 이날 광주에서 열린 총회에서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논의할 경우 전문에 동학농민혁명과 2·28민주운동,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이념을 명시하고,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명기는 5·18에 대한 애국 행위를 차단하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공론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만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미래통합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극우에 선 곳은 제1야당 그 마음 변치 않기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여제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를 방문해 원로 정치인들과 환담했다. 헌정회원들은 과거 당 일부 인사들의 5·18 폄하 발언에 대해 원내대표가 사과하고 전날 광주를 방문·참배한 행보를 높이 평가했다. 이상민 운영위원장은 “그것이 바로 협치다”라고 했고 신명 여성위원장은 “어제 광주에서의 모습은 참 보기 좋았다”고 말했다. 과연 우리가 보기에 그 모습은 참 좋았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 주 원내대표는 유가족에게도 사과의 말을 전했으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제창하기도 했다. 보수 야당의 원내대표가 주먹을 쥐고 위 아래로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는 시민들의 감회도 납답했으리라.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참배해 주고 영령들을 위해 사죄한 데 감사하게 생각합

니다.” 유족 단체 관계자들도 주 원내대표에게 이 같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지난해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대표 등 지도부가 방문했을 때 물병이 날아오는 등 거센 반발이 있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입법 활동에 노력해 달라는 5·18 단체 관계자의 요청에 호응하기도 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성격, 권위에 대한 평가는 이미 법적으로 정립된 것 아니겠느냐. 간혹 탄소리를 해서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고 잘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우리는 주 원내대표의 이번 사과를 통합당이 5·18 외곡과 폄하를 일삼는 극우 세력에 선을 긋는 일종의 결별 의식이라고 보고 싶다. 문제는 진정성이다. 그리고 그 진정성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되는 5·18 관련 입법에 통합당이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따라 증명될 것이다.

無等鼓

스마트폰이나 PC 카메라 등으로 환자 와 화상통화를 하면서 진료하는 것을 원격의료라고 한다. 원격의료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하는 원격 진료와 화상으로 환자 상태를 살피는 원격 모니터 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모두 불법이다. 이때문에 부정맥을 감지해 원격 조정하는 기능이 있는 심입형 제세동기를 몸안에 시술할 때도 기능을 꺼 놓고 심는다. 집에서 복막투석을 받는 신부전 환자의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중앙정보 센터로 전송되는데, 의사 가 이를 보고 투석 강도를 원격 조절할 수 있지 만 이 또한 불법이라 스위치를 꺼 놓는다. 우리나라에서 원격의료는 1988년 의료기관 간 시범 사업으로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시범 사업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는 딱 두 번 허용됐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일부 대학병원에서 제한된 전화 진료 가 실시됐고 이번 코로나19로 지난 2월 24일부터 전화 상담과 대리 처방이 진행되고 있다.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는 컸고 만족도

는 생각보다 높았다. 2018년 한국소비자원이 20대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이용 의향을 묻은 결과 82.3%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원격의료를 이용한 건수는 26만2121건이었는데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87%를 기록했다. 원격의료를 시행 중인 선진국들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미국에선 보험 적용 범위를 늘리자 원격의료 비중이 올해 들어 28배나 늘어 병원 치료를 넘어섰다. 중국에선 원격의료 이용자 수가 3억 명이 넘는 업체가 등장했고 일본은 원격진료 대상을 초진까지 확대했다. 대한의사회회가 “전화 상담과 처방을 전면 중단하라”는 권고문을 13만 회원에게 보내 논란이다.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움직임에 반발해 보이콧을 주문한 것인데 의협 회원을 제외하고 호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다. 아무리 이익 단체라지만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환자(국민)는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 불쌍스럽다. /정필수 제2사회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월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기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